

Issue Monitor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삼성KPMG 경제연구원

September 2015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The contacts at Samjong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범석**  
경제연구원  
원장  
Tel: + 82 2 2112 0770  
[edwardkim@kr.kpmg.com](mailto:edwardkim@kr.kpmg.com)

**이광열**  
경제연구원  
상무이사  
Tel: + 82 2 2112 0062  
[kwangryeolyi@kr.kpmg.com](mailto:kwangryeolyi@kr.kpmg.com)

**박광빈**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Tel: + 82 2 2112 3849  
[kwangbinpark@kr.kpmg.com](mailto:kwangbinpark@kr.kpmg.com)

**이광용**  
경제연구원  
연구원  
Tel: + 82 2 2112 6611  
[kwangyonglee@kr.kpmg.com](mailto:kwangyonglee@kr.kpmg.com)

<i>Contents</i>	<i>Page</i>
<b>Executive summary</b> .....	<b>2</b>
<b>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b> .....	<b>3</b>
<b>중국 경제위기 촉발 원인: 비효율적 투자, 과잉설비</b> .....	<b>5</b>
<b>중국발 경제위기의 뇌관</b> .....	<b>11</b>
<b>중국발 경제위기시 영향</b> .....	<b>12</b>
<b>대동사회로의 비상(飛上)을 준비하는 중국</b> .....	<b>15</b>
<b>중국발 위기, 우리의 대응방안</b> .....	<b>24</b>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주)과 관계회사(이하 "삼정")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시장, 회사,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삼정KPMG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정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정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정KPMG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 Executive Summary

정부 주도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중국 경제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개혁정책을 통해 비효율적 투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과도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과 실물경제 성장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 중국 경제위기 촉발 원인: 비효율적 투자, 과잉설비

- 정부 주도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양적 성장은 비효율적 투자에 따른 과잉설비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는 현재 중국발 경제위기로 대두의 주요 원인이 됨
- 이러한 비효율적 투자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에 대한 국영은행의 암묵적 지원,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이 지적됨

## ■ 중국발 경제위기의 뇌관

- 중국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와 이로 인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는 향후 중국발 경제위기 촉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더욱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 중국발 경제위기가시 영향

- 특히 중국발 경제위기 발생 시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임
- 또한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인해 관련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발 경제위기가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신흥국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확산될 경우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 대동사회로의 비상(飛上)을 준비하는 중국

-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초기에 수립된 발전전략에 따라 계속 성장하여 왔으며, 최근 지속성장을 위해 부채 감축, 금융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함
- 더불어 '소강사회'를 넘어 '대동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중국 경제의 단기적 성장 둔화는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로 판단됨
- 그러나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거와는 다른 對중국 전략이 필요함

## ■ 중국발 위기, 우리의 대응방안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 신흥도시로의 진출,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 등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수출구조를 다변화시키고,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거시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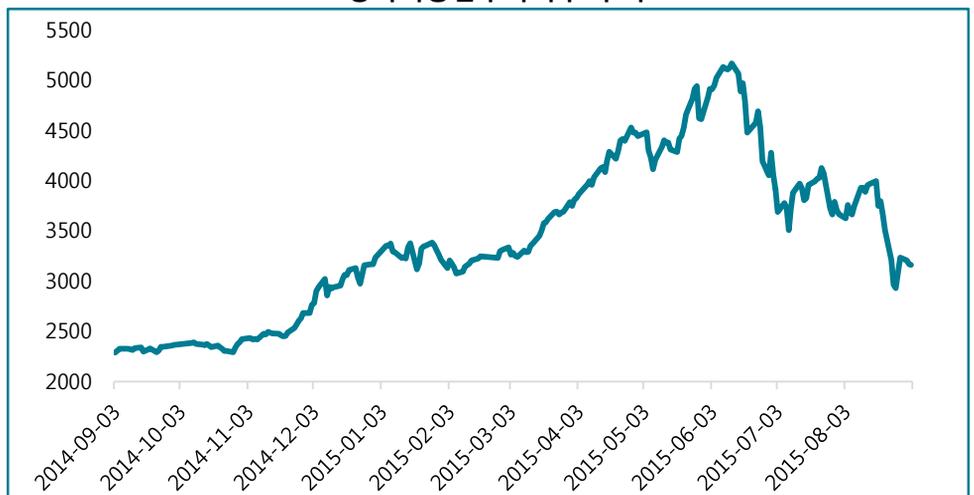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 경착륙에 대한 우려대두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 몇 년 간 가치가 폭증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으로 부상했다. 지난 1년간('14년 6월 6일~'15년 6월 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46%나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다. 중국의 전체 주식시장에서 증가한 가치만 약 6조5천억 달러에 이른다. 단 1년 사이에 중국 전체 GDP의 60%를 상회하는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식투자 열풍은 광풍으로 바뀌었고 점차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주식시장 버블붕괴에 대한 우려가 폭발장을 불러온 것이다. 상하이 증시는 2015년 6월 12일 5,166을 최고점을 기록한 후 9월 2일 기준 40% 하락한 3,160을 기록했다. 이 기간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본만 약 4조 달러로 영국 전체 증시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추이>



Source: Bloomberg, KPMG Analysis

하지만 주식시장보다 더 문제는 중국 실물경제다. 중국의 실물경제가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부분 실물경제 성장률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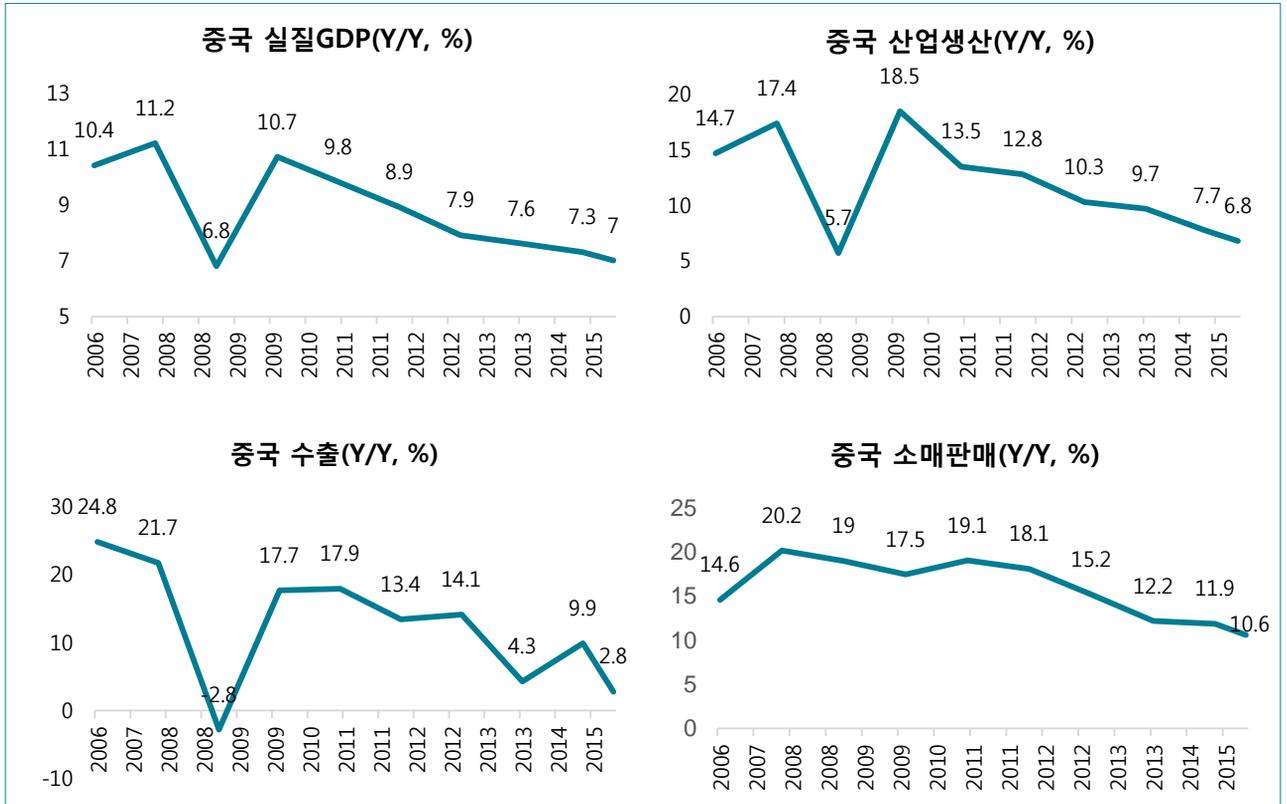
먼저 중국의 GDP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7%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2015년 6월 전년동월 7% 감소했다. 중국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얼어붙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미국에서의 수요는 회복되고 있으나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 역시 계속 줄고 있다. 연료로 환산했을 때 3월 12.7%, 4월 16.2%에 이어 5월에 17.6%나 수축했다. 수입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본투자를,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있다. 내수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 증시폭락보다 실물경제 침체 심각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Source: 국제금융센터

위의 실물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중국경제는 지금 비상(非常)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성장둔화 속도다. 향후 중국의 경제가 7%대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연착륙한다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을 뿐더러 모든 국가들이 충분히 완충장치를 마련하며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2년 안에 3%대의 성장률로 하락하는 경착륙을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는 글로벌 모든 국가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2008년 금융위기에 글로벌 경제의 '백기사'로 등장했던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물론이고 신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발 경제위기 발생시 한국, 신흥국, 선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그리고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촉발 시킨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잠재 리스크에 대해 분석했다.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중국 경제위기 촉발 원인

### 비효율적 투자

1980-2010년간 중국의 성장전략은 정부주도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양적 성장이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민간의 높은 저축률과 정부 의지대로 투자를 가능케 하는 국유기업과 국영은행이 있었다. 하지만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의 증가 자체만으로 GDP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지속성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중국 전체 투자의 절반이 낭비된 투자

중국의 투자 효율성을 살펴봤을 때, 그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수 세와 왕위안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중국에서 일어난 투자의 절반인 6조8천억 달러(7508조원)가 낭비되었다고 발표했다.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서 불리던 광둥성 등 제조업 중심도시들에 빈 아파트, 폐허가 된 공장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들마저도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 투자발생 배경에는 양적 성장에만 중심을 둔 맹목적 투자, 이로 인한 기업의 부채 증가,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국유기업-국영은행 출자 악순환이 중심에 있다.

이는 투자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지표를 살펴보면 중국의 투자의 비효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점 심화되고 있다.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한계고정자본계수)이 있다. ICOR은 실질 GDP 1달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의 수치를 의미한다.

$$ICOR = I / (\Delta GDP) = I_t / (GDP_t - GDP_{t-1})$$

<ICOR지표를 통한 중국투자의 비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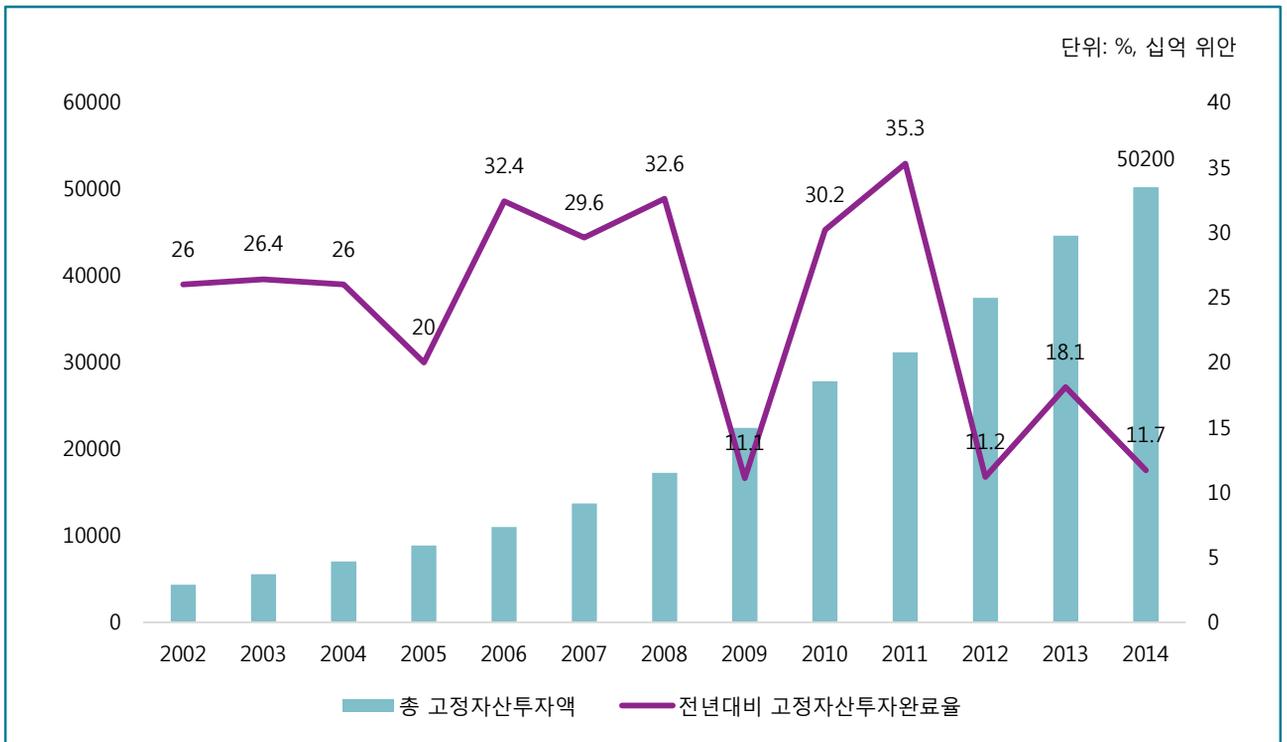
Source: KPMG ERI Analysis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10%에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빠르게 압축성장을 한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등 고정자산투자(Fixed Asset Investment)에서 투자의 비효율성은 과잉설비의 결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항목은 중국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기준으로 국영기업투자, 집합투자, 민간투자, 합작투자, 외국인투자로 구성된다.

고정자산투자 지표를 보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약 50조 위안을 기록했다. 하지만 투자대비 투자가 집행된 완료율을 살펴보면 20~35%를 상회하던 비율이 2012-2014년간 금융위기 수준인 11%대로 떨어졌다. 최근 3년간 투자의 비효율성이 금융위기 수준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및 투자완료율 추이>



Source: Bloomberg, KPMG ERI Analysis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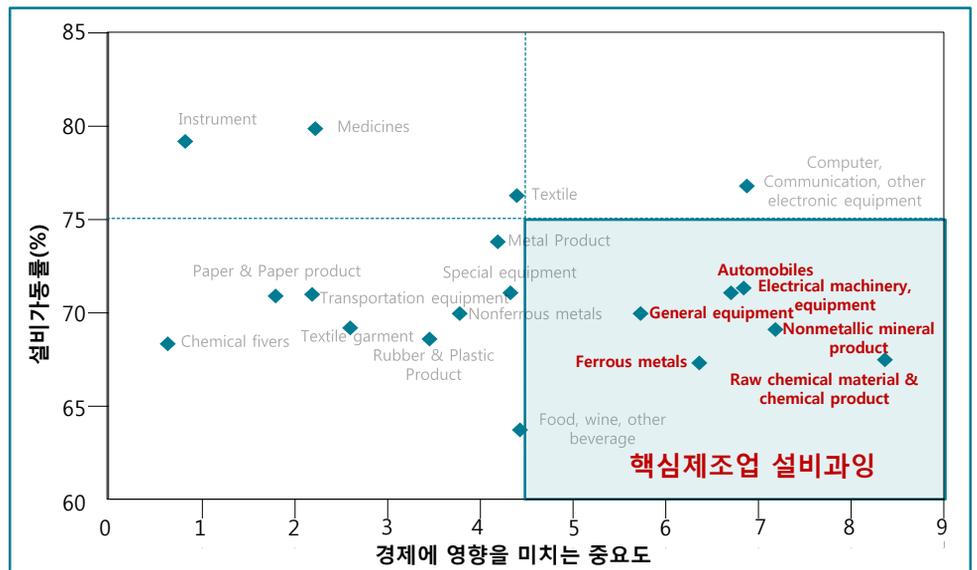
## 과잉설비

중국 인민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제조업 지수 발표에서 중국 제조업 설비가동률은 80%를 기록했다. 과잉설비의 기준은 글로벌이 설비가동률 75% 이하가 과잉설비로 판단하지만 중국통계청은 79% 이하를 과잉설비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중국 제조업 전체는 과잉설비에 근접해 있다. 무엇보다 중국 제조업의 핵심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일반장비,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에서 설비가동률이 75%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력산업  
설비가동률  
75% 하회→과잉

2015년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과 중국통계청이 발표한 설비가동률 조사에서도 중국의 핵심제조업은 과잉설비로 조사되었다. 건설 및 인프라의 원자재인 철강산업에서 조강(Crude Steel)의 설비가동률은 2013년 72.1%를 기록했고, 시멘트는 75%, 화학제품은 67%, 자동차는 74%를 기록해 기준치인 75%를 하회했다.

<중요도에 따른 과잉설비 업종 분류-제조업>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sia Development Bank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비효율적 투자 발생 배경

### 1) 국유기업과 국영은행의 투자의 비효율성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유기업이 주도해왔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발정책과 더불어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한 철강, 조선, 에너지, 자동차, 인프라 관련 국유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미국 포춘지(Fortune)지가 발표하는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중국기업은 2014년 대비 6개 늘어난 106개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해 중국기업은 강한 성장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6개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이 84개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국유기업들이 갖고 있는 중국 내에서의 위상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유기업은 외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사실상 내적으로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조적 문제의 발단은 1980년대 시행된 국유기업의 승포책임경영제와 독립채산제에서 비롯된다.

승포책임경영제는 1978년 도입된 제도로 국유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정해진 이윤을 상납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업이 유보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골자이다.

독립채산제는 승포책임경영제의 보조책으로 국유기업의 독립채산제와 이윤추구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다. 이는 계획생산량을 달성함에 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와 생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제도는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독립된 형태의 경영권을 갖게 했고, 기업에서 발생된 이윤추구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이는 국유기업의 자율경영확보가 단기적 적자를 숨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유기업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더불어 경영진의 문제도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대부분의 수장은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고위관료나 정치적 후광을 등에 업은 경영진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은 해당기업의 주력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권사업에도 개입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략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부실에 대한 부담감 완화도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재정부담을 높이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은 직원의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민간기업보다 높은 의료보험혜택, 연금 등을 제공해 고비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국 국유기업,  
하지만 속빈 강정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이렇게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투자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국영은행의 암묵적 지원이 있었다. 중국의 국영은행은 국유기업이 경제개발 계획에 맞추어 양적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자금 줄이 되어왔다. 2014년 기준 중국 4대 은행인 농업, 건설, 중국, 공상은행은 모두 국영은행으로 국유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국유기업의 절대적  
지원자,  
국영은행→무분별한  
대출이 부실  
초래가능성 확대**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영은행의 암묵적 지원은 국유기업-국영은행 간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 먼저 같은 직급을 비교했을 때 국유기업의 임직원이 국영은행의 임직원보다 높은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국영은행의 對국유기업 대출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주력사업의 기관일수록 자금지원 압박은 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유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었을 때, 국유기업은 국영은행에 대출연장을 요구하고 은행은 이를 묵시하며 받아 들인다.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이 비효율적 투자로 인한 부실도 국영은행의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에 의해 감추어 지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실을 보조금으로 채워 넣어 경영지표를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서 국유기업이 잇달아 상장하면서 경영지표 왜곡은 더욱 심각해졌다. 시장자금조달을 통해 성장하려면 기업의 성과가 중요한데 상장된 국유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온갖 자구책을 통해 경영성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유기업-국영은행 출자구조의 악순환 속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투자는 기업부채 증가와 은행의 순이익 감소, 부실채권(NPLs) 증가라는 결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2) 중국 지방정부의 감독관리 소홀



성장중심 성과평가,  
지방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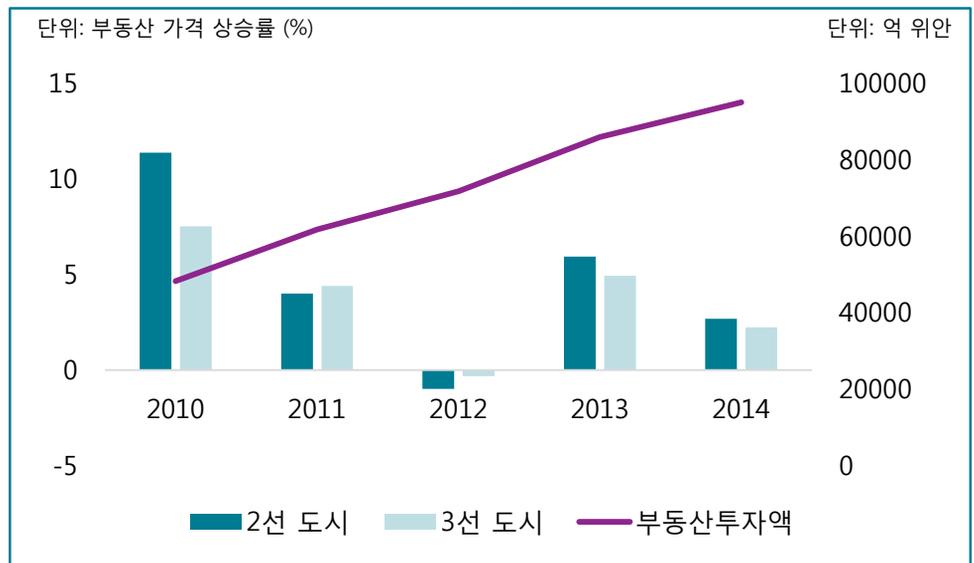
개방개혁 정책 이후 중국의 양적 성장에 대한 압박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전해졌다. 지방정부에 대한 성과지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GDP의 성장이 우선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경제발전과 GDP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양적 성장이 급한 지방정부는 임기 내 실적 과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렇게 추진한 프로젝트들 중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는 결국 부채를 만들게 되었지만 임기 만료 후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로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악순환은 더욱 심각해졌다.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금융위기를 타파하려던 중국의 의도가 빛나간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부양 자금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로 흘러 들어 갔고, 이 자금은 GDP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투자, 특히 부동산, 인프라에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이미 비효율적 투자로 발생한 과잉설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과잉설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투자자들에게 부채를 활용해 부동산 및 인프라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눈부시게 변화하는 지방정부의 인프라와 개발계획을 통해 장미빛 미래를 제시한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식을 줄 몰랐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2, 3선 도시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많은 유령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2014년 중국 국가도시건설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유령도시는 현재 50곳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 3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붕괴에 대한 압박은 부동산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권고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2, 3선 도시에 투자한 중국의 비효율적 투자는 중국발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방도시의 부동산투자 비효율성>



Source: Bloomberg, World Bank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중국발 경제위기의 뇌관

앞서 언급했던 중국정부의 비효율적 투자로 발생한 기업과 가계의 부채증가는 향후 중국발 경제위기 발생의 뇌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중국의 경제침체로 허덕이는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 부채의 증가

중국의 부채문제는 국유기업과 지방기업 중심의 기업부채, 가계부채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인 CEIC는 2014년 중국의 GDP대비 기업 부채는 169%로 예측하고, 2015년 기업부채 비율은 GDP대비 17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더한 중국의 GDP대비 총 부채비율은 251%로 미국의 GDP대비 총 부채비율 231%를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 S&P가 2014년 기업부채를 기반으로 분석한 조사에서도 중국의 기업부채는 2015년부터 2019년 간 연평균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업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비이상적 부채구조,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의 부채가 가계와 정부, 기업이 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기업부채로의 쏠림이 심하다. 중국 기업의 자산은 금융시장 보다 실물시장에 더 크게 연동된다는 점에서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가계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일 부동산시장의 붕괴가 시작되면 그동안 빚을 내어 부동산 투자를 했던 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붕괴로 인한 가계부채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소비위축은 중국경제침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부채의 GDP 대비 비중; 미국과의 비교>



Source: CEIC, S&P, KPMG ERI Analysis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중국발 경제위기시 영향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몸살을 앓는다”는 말처럼, 중국발 경제 위기 발생 시 그 여파는 글로벌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에 취약한 신흥국은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경제위기가 글로벌 전체위기로 전이되면서, 선진국 경제에도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한국은 중국과 교역 관계가 깊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국내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對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2위인 미국과 비교해서도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이다. 2011년 이후 중국의 대한 수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출국의 다변화라기 보다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2014년 한국 수출상위 Top 10 국가>

순번	국가명	2014년	
		수출금액(백만달러)	수출비중
1	중국	145,288	25%
2	미국	70,285	12%
3	일본	32,184	6%
4	홍콩	27,256	5%
5	싱가포르	23,750	4%
6	베트남	22,352	4%
7	대만	15,077	3%
8	인도(인디아)	12,782	2%
9	인도네시아	11,361	2%
10	멕시코	10,846	2%

Source: Bloomberg, KPMG ERI Analysis



### 중국발 경제위기, 한국경제에 직격탄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큰 경제구조 때문에 해외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011년 '최근 1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은 미국 조지메이슨대 타일러 코웬교수에 따르면,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이 받을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IMF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음을 지적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고령화에 대비한 헬스케어 등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원동력을 다변화할 것으로 제언했다.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신흥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발 경제위기는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리타니, 투르크메니스탄, 시에라리온, 감비아, 몽고, 말리, 솔로몬 제도 등 對중국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싱가포르(23.6%), 대만(39.7%), 브라질(19%), 태국(16.6%), 말레이시아(16.9%)도 중국발 경제위기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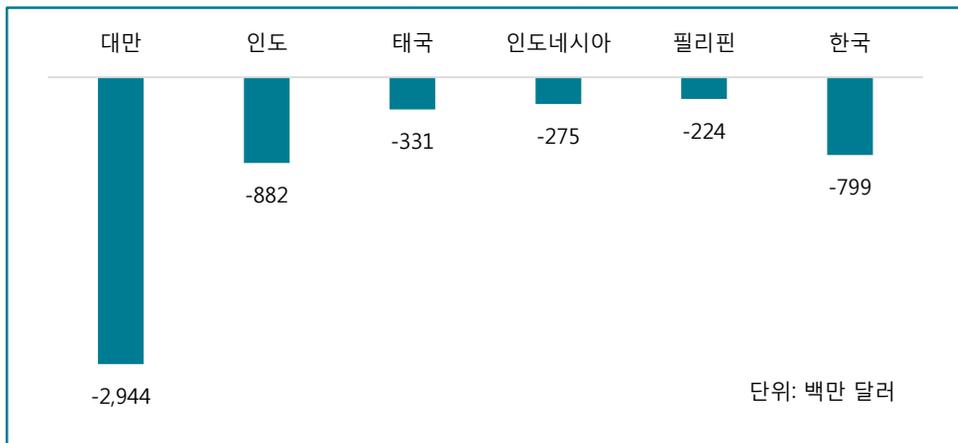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역시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의 양적 성장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가 높았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수요가 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중국 에너지 및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오만, 이라크, 칠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對중국의 구리, 철광석과 같은 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역시 중국발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커피 및 코코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나, 우간다, 르완다는 이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 외에도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같은 외부효과는 신흥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악화되는 수출경쟁력은 신흥국의 여러 공장을 문닫게 하고 소비, 고용, 생산 등의 실물경제를 악화시켜 심각한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을 통한 자금유출은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다.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아시아 신흥국들이 지난 6월 해외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이미 외부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6월 회수된 해외투자금>



Source: Bloomberg

“  
신흥국 위험  
= 글로벌 위험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선진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발 경제위기 여파는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이될 경우 회복되고 있는 선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지 않을 것이다.

교역관계부터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는 중국에 주로 항공기, 우주장비,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등을 수출하여 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비중은 2014년 미국이 24%로 선진경제에서 對중국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22%로 뒤를 이었다. EU지역에서 영국이 對중국 수출비중 12%로 가장 높았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5%를 기록했다.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EU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다는 의미다.

<2014년 주요선진국 對중국 수출입 비중>

국가	수출		수입	
	금액(백만달러)	비중	금액(백만달러)	비중
미국	397,099	24%	154,136	7%
일본	149,452	22%	162,686	20%
영국	57,133	12%	23,551	4%
독일	72,731	5%	104,776	9%
프랑스	28,976	5%	27,116	4%

Source: 한국무역협회 통계

하지만 중국발 경제위기 발생시 신흥국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회복하고 있는 선진경제에 부메랑처럼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미국과 EU경제는 중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중국의 소비위축과 수요감소로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신흥국 전체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금번 미국금리 동결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가장 잘 보여준다. 전세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금리인상은 2015년 9월 미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를 잠시 연기시켰다. 미연준은 표면적으로 금리인상이 실시되면 신흥국 자금유출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판단하여 내린 동결 조치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기 둔화 모멘텀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쳐진다면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는 회복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또는 내년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의 자금 이탈 우려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중국발 위기,  
회복하는 선진경제  
다시 회향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대동사회로의 비상(飛上)을 준비하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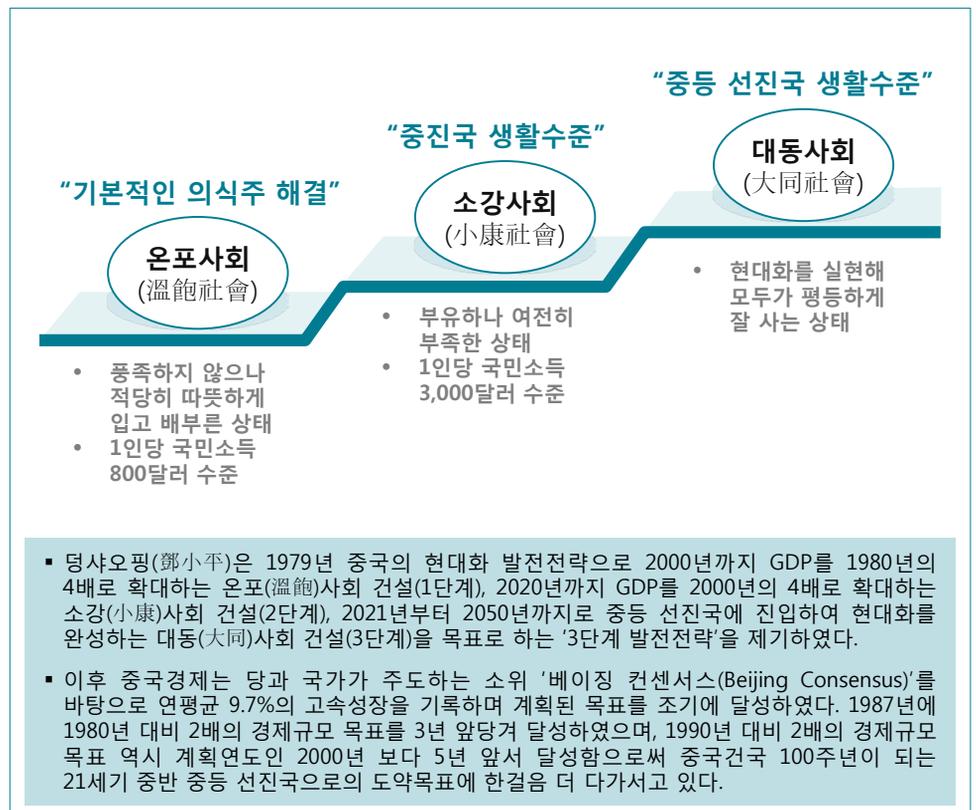
최근 중국경제 상황을 앞에서 살펴봤듯이 중국경제는 현재 비상(非常)이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중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과도기적 비상(非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개혁개방 초기부터 수립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을 기반으로 중국은 계획적인 발전을 이룩해왔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국 내 위험과 부작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시진핑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물론 부작용발생 속도와 위험의 크기가 중국정부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계획된 발전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현 시점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천명하고, 비효율적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시진핑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유기업의 개혁, 금융시장개방과 그림자금융 억제를 통한 금융개혁, 신예산법 도입을 통한 지방정부의 부패척결,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선진산업양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 역시도 중국이 지속성장을 통해 소강사회에서 대동사회로 가기 위한 계획된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단기적 성장둔화가 지속성장을 통해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인 것이다.

“비상(飛上)구는 있다... 정책적 개혁 노력

### <중국의 3단계 현대화 발전전략>



Source: 「중국 제 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2005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 정책

최근 시진핑의 정책을 살펴보면, 지속성장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 시진핑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은 크게 부채감축, 금융개혁, 국유기업 개혁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부채감축	1)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억제
	2) 신(新)예산법 시행
금융개혁	3) 금융시장 개방 - 선강통(深港通) 추진
	4) 민영은행 설립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5) 국유자본 경쟁력 강화
	6) 국유기업 부정부패 척결

### 1)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억제

그림자금융이란 은행의 부외(off-balance)업무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중개 활동을 말한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등 은행의 부외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신용과 비은행금융기관(신탁회사, 재무회사, 리스, 민간대출 등)을 통해 창출되는 신용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는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s, WMP)이 있다.

이러한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보호도 쉽게 받을 수 없어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정부 역시 그림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부채 증가의 주된 경로인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9년 말부터 은행대출에 기반한 WMP 발행을 제한하여 왔으며, 2013년 3월부터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한 2014년 5월, 시중은행간 상호대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은행들이 복잡한 상호대출을 거쳐 지방정부·부동산 개발업체·생산과잉 대기업 등에 대한 고위험대출을 은행을 상대로 한 저위험 대출로 위장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있다.

#### <중국 정부의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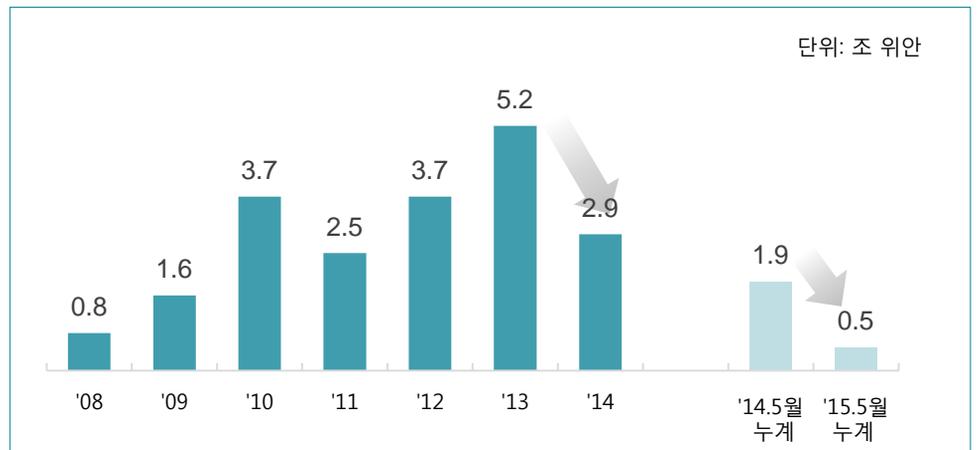
해당기관	공표일	주요 내용
은행감독위원회	2013년 3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자산이 WM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제한하고, 은행 총자산의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li> </ul>
국무원	2013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은감회), 보험(보감회), 증권(증감회), 온라인 금융사(인민은행) 등의 감독기관이 상이하므로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 강화 등</li> </ul>
인민은행 및 관련 감독기관	2014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출규모를 전체 부채의 1/3 미만으로 제한</li> <li>은행이 타행에 제공하는 대출규모 기본자본(Tier 1)의 50% 상회 불가 등</li> </ul>

Source: 국제무역연구원(2014),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 BRICs INSIDE 2014, 인용 및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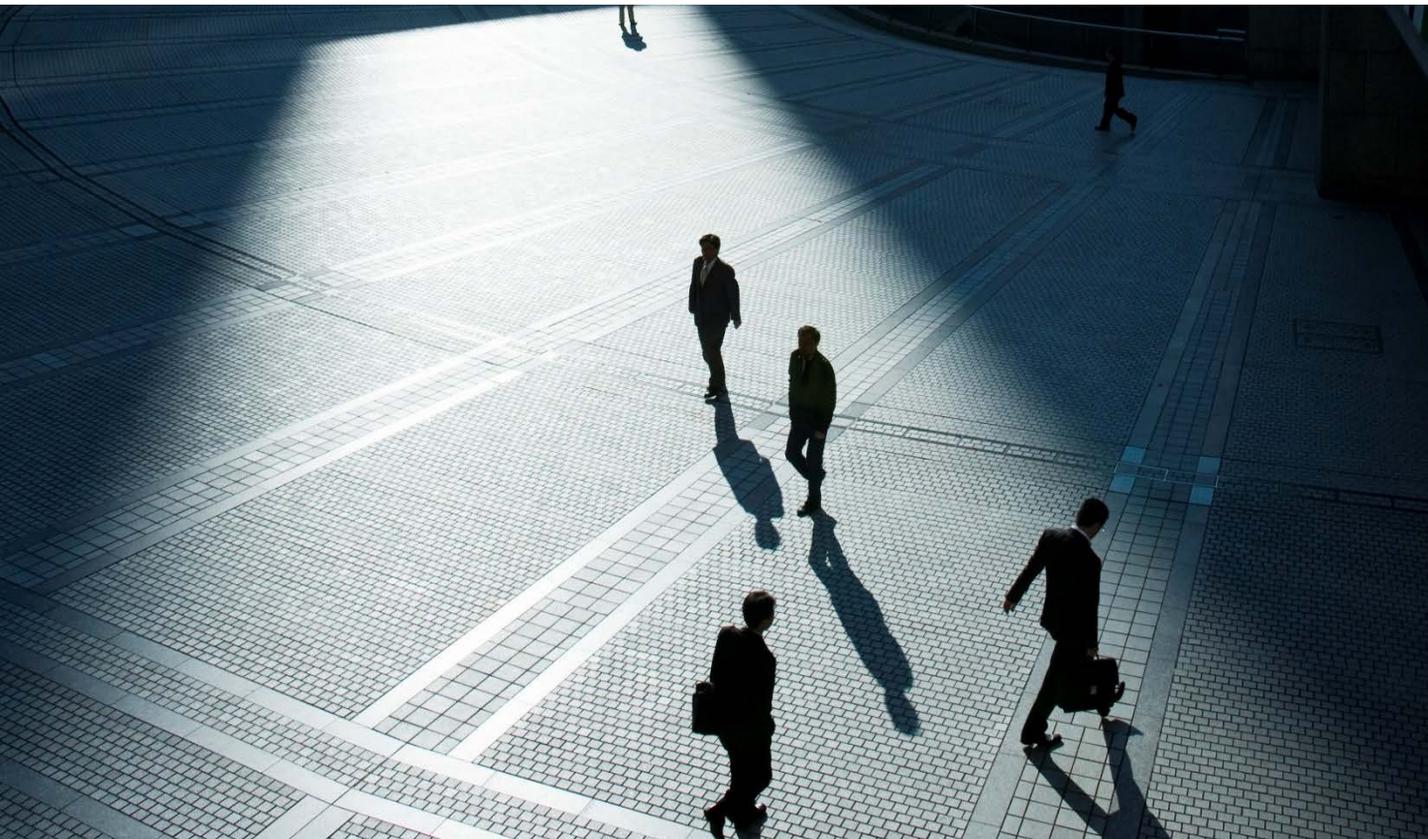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노력에 힘입어 2014년부터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규 신용 공급규모가 축소해 2013년 5.2조 위안에서 2014년 2.9조 위안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자금융 등을 통한 신용공급이 제한되면서 그 동안 과잉투자 문제가 제기되었던 제조업 및 부동산 개발 부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지방정부의 고정투자 억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신규 신용공급 규모>



Source: 국가통계국, Wind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2) 신(新)예산법 시행

중국정부는 지방정부 부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금년부터 신(新)예산법이 시행된다.

신(新)예산법은 1994년에 제정된 재정개혁안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방채 발행의 제한적인 허가,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중국 지방정부 산하 자금조달 기구)를 통한 용자 불허, 부채 분류 변경, 부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증대했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채가 급증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기금 수입의 규모가 계획된 투자규모 대비 작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LGFV를 이용한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했던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앙정부가 부양정책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지방정부의 차입 증가에 대해서는 크게 통제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개발 경쟁이 심화되었고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 및 이와 관련된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LGFV가 발행하는 채권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한데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이 있었으므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고 지방정부의 차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신(新)예산법의 시행으로 지방정부는 더 이상 LGFV나 민간기업 혹은 비영리기관을 통해 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되어 무분별한 자금차입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느슨한 예산관리가 재정악화와 차입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예산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정부 채무관리  
및 감독 강화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3) 금융시장 개방 - 선강통(深港通) 추진

2014년 11월 17일 후강통(沪港通)의 정식 개통 이후 상하이와 홍콩 두 지역의 쌍방향 투자 편의성이 대폭 제고되었다. 이러한 후강통의 개통은 내륙 시장과 홍콩 시장의 상호 연계를 통해 두 지역에서 자원 공유 기회 공유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두 시장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시장 효율을 높이고 시장의 자원 배분 역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제 중국정부는 후강통의 시행에 이어 선전과 홍콩의 주식시장을 연계하는 '선강통(深港通)'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선전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및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공사가 현재 각 방면의 준비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선강통 방안의 설계가 완료되어 시스템 기술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후강통의 시행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일부 보수적인 부분이 있으며, 금년 내에 선강통을 시행하여 시장에서 후강통보다 더 큰 기능을 발휘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업자금조달 체계를 더욱 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이자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 4) 민영은행 설립 가속화

중국정부의 민영은행 설립은 국영은행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즉 민영은행 설립 가속화가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은행업계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미 관련 부처들이 민영은행의 설립 범위 확대를 명시하고, 민영은행 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민영은행의 설립 확대와 발전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과 소형기업 및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기업의 용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5개 민영은행 설립 비준 현황>

은행명	지역	비준일	등록 자본금
치엔하이웨이중은행	광둥성 선전	2014년 7월 25일	30억 위안
민상은행	저장성 원저우		20억 위안
진청은행	텐진		50억 위안
화루이은행	상하이	2014년 9월 26일	40억 위안
왕상은행	저장성 항주		30억 위안

Source: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  
Openness,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혼합소유제'

### 5) 국유자본 경쟁력 강화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현재진행형이다. 덩샤오핑 개혁개방정책 이후 꾸준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 했으며, 그 결과 국유기업은 2003년 196개에서 2013년 113개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현대적 기업제도 도입을 통해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성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국유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 핵심과제로 천명하고, 보다 강력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 추진이다. 혼합소유제란 국유기업의 재산권을 집단자본이나 비(非)국유자본 등에 개방하는 제도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국유기업의 소유구조를 다양화하고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함이다.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은 국유기업의 상장 확대와 맥을 같이한다. 국유기업 상장을 통해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가증권 발행·지분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유구조를 다각화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을 견제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영의 효율성 문제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의 상장은 또한 기업가치 결정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이사회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혼합소유제를 통한 국유기업의 개혁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중국정부의 핵심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유기업에 대해 민간자본의 접근을 확대하려는 중국정부의 시도는 국유자산의 소유가 국가에게만 허용된다는 기존의 성역을 무너뜨렸다는데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 <중국의 혼합소유제 추진 방안>

구분	주요 내용
국유자본 주도형	▪ 국유자본이 기업의 통제권과 경영권을 장악하고, 민간자본은 주주로만 참여 (공공산업, 자원의존산업, 군수산업 등)
국유자본 지배형	▪ 국유자본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반면, 민간자본은 소액 주주로 참여하되 전문경영인 영입 (기초재료과학, 에너지 등)
국유자본 참여형	▪ 국유자본이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민간자본이 경영권을 지배 (경공업 및 서비스 등)
매매합작형	▪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매매에 의해 쌍방 합작 (국유기업의 외주서비스산업 등)

Source: 한국은행,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현황 및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제2014-45호.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의법치국(依法治國)’  
기조는 개혁 성공의  
축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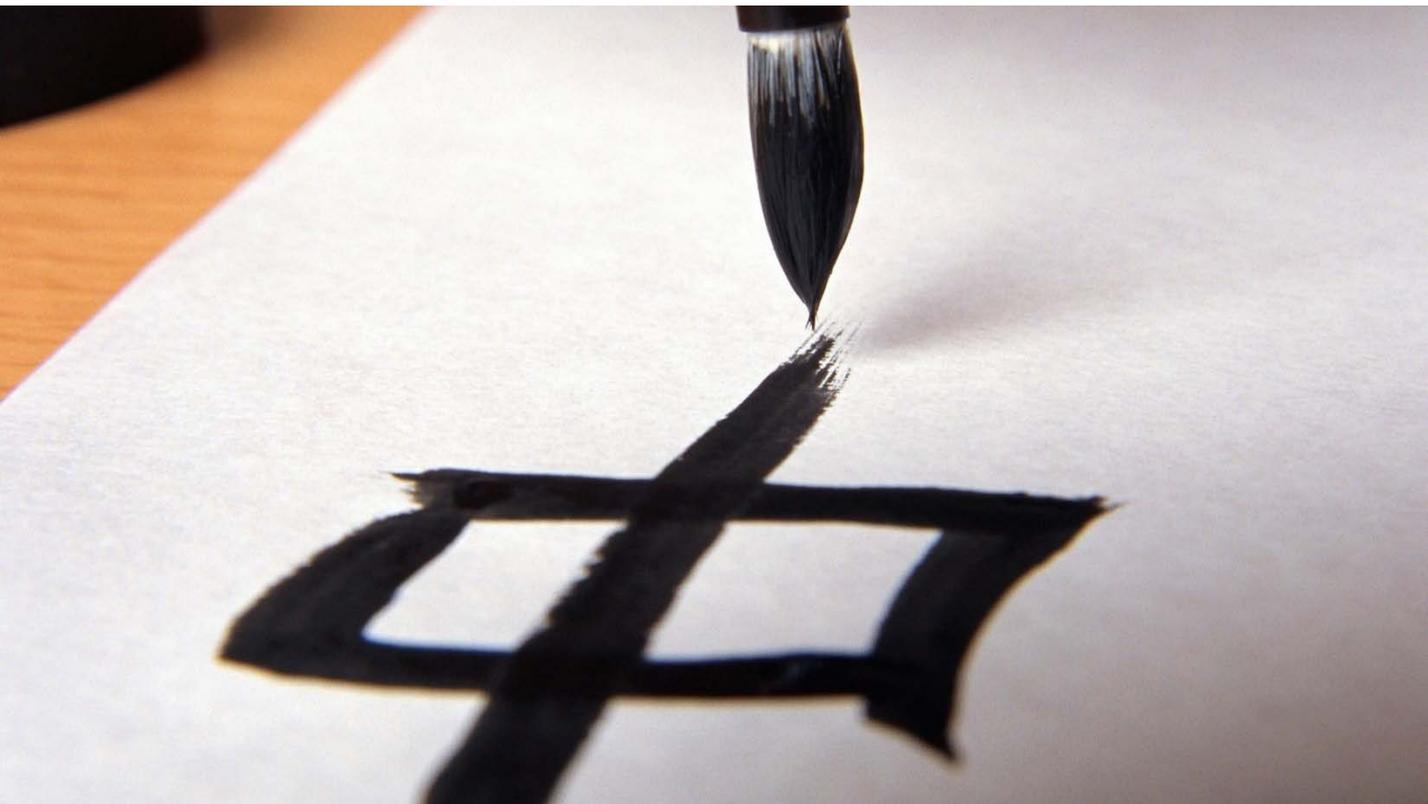
## 6) 국유기업 부정부패 척결

국유기업의 부정부패는 중국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영도소조> '8차 회의'와 '9차 회의'에 걸쳐 의법치국(依法治國)에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시키고 '법치중국' 건설을 목표로 5대 체계와 6대 의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경제가 소위 '신창타이(新常態)'라 불리는 중국식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여 외연적 발전 단계에서 과학적 발전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非)법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회상층부의 의식을 개혁하고,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중국정부는 당 고위간부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이어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을 재정비 하기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비리 척결로 사정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 부정부패 방지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는 연내 모든 국영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개하고, 실제로 53개 전략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점검 등 조사를 늘려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과 자본, 자원을 가진 부서에 있는 이들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산 감독시스템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대동사회로 도약 - 미래성장동력 육성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해 과잉설비에 따른 비효율을 억제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G1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은 제조업 개혁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대동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 「중국제조 2025」

2015년 중국 국무원에서 중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로드맵인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30년간 총 3단계로 구성된 본 계획은 전략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2045년까지 중국을 제조업 분야의 세계 최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려 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2025년까지 제조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성장 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은 10대 산업의 성장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각 산업별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M&A 등을 통해 산업 집중도를 높여 고유 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국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면 중국이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 <'중국제조 2025' 10대 중점산업 분야>

산업 구분	세부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적회로 및 전용 설비, 정보통신 설비</li> <li>운영체제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li> </ul>
고급 수치제어 기계 및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급 NC 공작기계 / 로봇(공업용, 특수 로봇 등)</li> </ul>
항공우주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설비(대형 및 간선 항공기, 헬기, 무인기 등)</li> <li>우주설비(탐재 로켓, 신형 위성, 유인 우주기술 등)</li> </ul>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 엔지니어 설비 기술(해양 탐사, 자원개발 등)</li> <li>첨단 선박기술(크루즈, 액화 천연가스 선박 등)</li> </ul>
선진 철도교통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제품 경량화 등</li> </ul>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자동차, 연료전지동력 자동차, 저탄소 자동차</li> <li>핵심 기술(고효율 내연기관, 스마트 제어 등)</li> </ul>
전력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효율 석탄전력 정화설비, 수력 및 원자력 발전, 가스터빈,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설비 등</li> </ul>
농업 기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 농기구 및 핵심 부품</li> </ul>
신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금속, 고성능 구조재료, 고분자재료 등</li> </ul>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류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의약(바이오기술 응용 신의약품 등)</li> <li>고성능 의류기기(영상설비, 의료용 로봇 등)</li> </ul>

Source: 국무원, 「중국제조 20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5.06. 인용 및 수정

“  
목표는 '세계 최고'  
제조업 업그레이드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란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같은 최신 인터넷 기술들을 기존 산업에 접목시켜 기존 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기존 산업에 인터넷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객 통점(痛點) 파악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은 무궁무진하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제조업과 인터넷을 결합한, 이른바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이 뜨겁다.

중국은 다른 제조 강국들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핵심 제조공정에 차세대 정보 기술과 제조장비를 융합함으로써 정보화와 산업화 융합전략을 통한 스마트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제조업 중점분야의 스마트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전면적인 스마트화를 실현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제품 생산주기 단축은 물론 불량품 발생률을 2020년 30%, 2025년에는 50%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인터넷 기술과 제조업의 성공적인 결합은 인건비 상승,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침체되어 있던 중국 제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에 걸쳐 유리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 제조업’  
이제는 제조업도  
스마트한 시대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중국발 위기, 우리의 대응방안

최근 우리나라의 8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15% 가까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된 이유로 중국의 경기 둔화를 꼽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무역 의존성과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의 무역비중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국가보다 중국발 경제 위기의 여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위기보다 중국발 위기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한-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하고 이미 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1·2선 도시보다는 경쟁이 덜하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 성(省)을 공략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수출 지역의 다변화 모색
- 2) 한·중 FTA를 활용한 진출 전략 모색
- 3) 중국의 신흥 성(省) 공략
- 4)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1) 수출지역의 다변화 모색

한국은 對중국 수출 편중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 경기변동에 의해 국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경제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과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외교관계가 성립된 이후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한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수출 정책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얀마 역시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3억 인구가 밀집해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된다.

아직 경쟁이 심화되지 않은 남아시아 국가들로의 진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낮지만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향후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규제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진출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란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으로의 수출 확대 기회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수출이 제한되었던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관련 철강제품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며,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산업기계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자원 협력 및 신흥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진출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시장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지역에서 얻기 힘든 기회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세안(ASEAN),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저변 확대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2) 한·중 FTA를 활용한 진출 전략 모색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이후, 2015년 6월 한·중 FTA의 정식 서명으로 양국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근시일 내에 비준이 완료되어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 교역품목의 50%와 중국 교역품목의 20%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향후 20년 이내에 양국의 90% 이상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이외에도 한·중 FTA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진출 여건 개선, 양국간 국제 분업 활성화에 따른 상호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업종별로 이러한 FTA 기대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성장 정책 기조가 투자 중심에서 내수시장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다면 그 동안 중국의 수입관세가 높아 수출이 어려웠던 소비품의 수출을 시도하거나, 중간제품 수출을 완제품 수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통관, 상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분야의 개선 사항을 활용하고, 양국간 국제분업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원자재 조달 전환 및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을 통한 원산지 특례 규정 활용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FTA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등을 통해 관세철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전기전자기기 인증(IECEE)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한·중 FTA 협정문에 명기된 바 있다. 아울러 원산지 관리 측면에서도 양국의 네트워크 활용, 원자재 조달 역내전환, 역외가공 지역(OPZ)내 생산 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 FTA의 업종별 / 기대효과별 영향>

● 효과 큼    ◐ 효과 제한적    ○ 효과 미약

업종 \ 효과	관세	비관세	분업	업종 \ 효과	관세	비관세	분업
전기전자	◐	●	●	비철금속	◐	●	○
자동차	○	◐	◐	기계	◐	○	○
섬유의류	◐	◐	●	화학	●	◐	◐
석유·석유화학	◐	○	○	플라스틱·고무·가죽	◐	◐	◐
철강	◐	○	○	농식품	◐	◐	◐

Source: 산업통산자원부, KOTRA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3) 중국의 신흥 성(省) 공략

중국은 22개의 성(省), 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22개 성의 평균인구는 4,600만 명 정도이며, 경제규모는 하나의 성을 개별국가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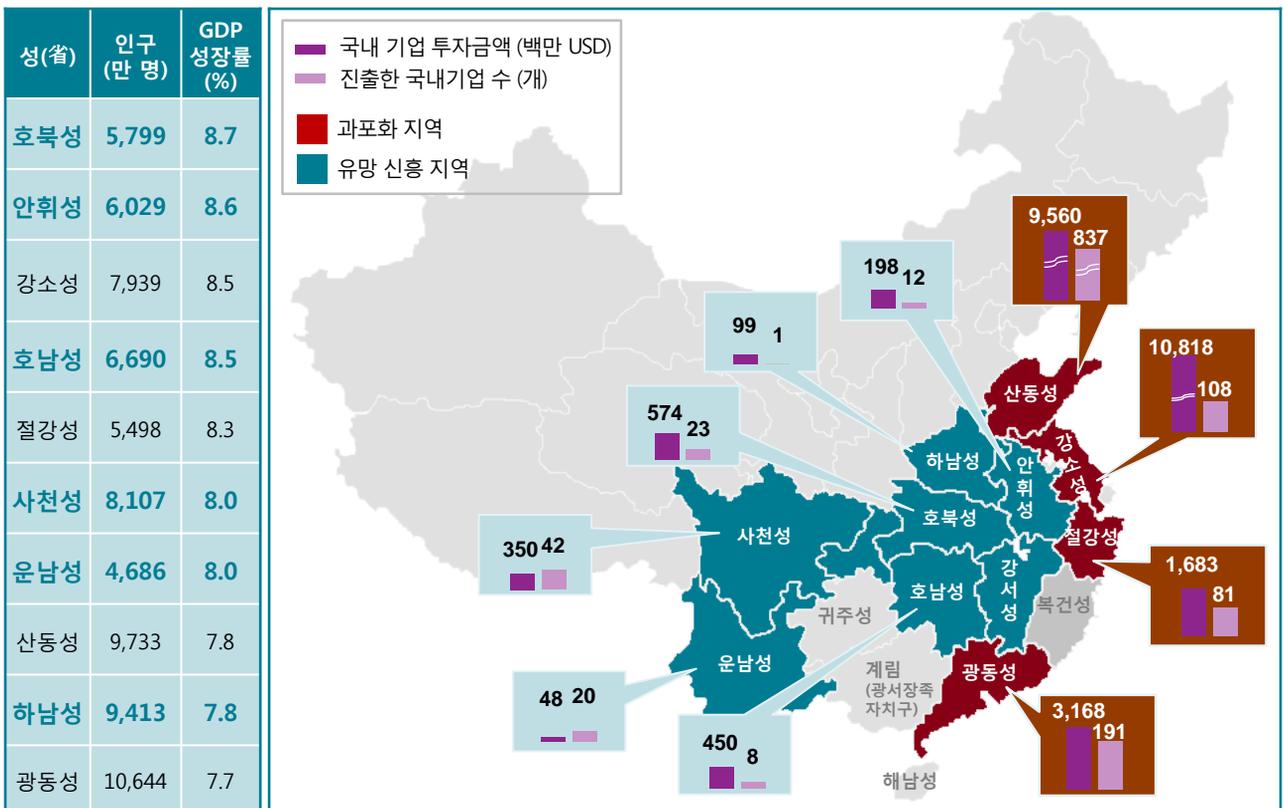
따라서 중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성 단위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 소비잠재력이 높은 성을 도출했다. 첫 번째 필터링을 통해 도출된 10개의 성의 노동인구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성이며, GDP가 중국전체 성장률인 7.3%를 상회하는 성들이다. 이들 성은 주로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성들이다.

이 중, 한국 기업이 이미 진출을 많이 하였거나, 한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높은 성들은 제외하여 총 6개의 성을 진출 기회가 높은 성으로 최종 제시했다. 6개의 성은 호북성, 안휘성, 호남성, 사천성, 운남성, 하남성이다. 제시한 성은 운남성을 제외하면 모두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성이며, GDP성장률이 7.8~8.7%사이에 있다. 따라서 소비잠재력, 노동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으로 선점할 수 있는 성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성들과 하위의 도시는 향후 중국 개발계획을 통해 산업과 소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잠재력과  
성장잠재력 높은  
신흥 도시 진출  
필요

<한국 기업 진출 유망 신흥성>



Source: Bloomberg(인구, GDP 2014년 기준), 수은 해외투자통계, KPMG ERI Analysis

# 중국 경제, 비상(非常)인가? 비상(飛上)을 위한 준비인가?

## 4)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소규모 개방경제의 부작용 최소화

중국경제가 단기적으로 경착륙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나, 중국경제의 기초여건과 정부의 정책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중국경제의 단기적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과 과잉투자 해소과정에서의 기업부채 부실화 및 은행건전성 악화 등의 중장기적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경제 관련 리스크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맞물려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대외 리스크의 전개 및 이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더욱 유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

원장

T: 02-2112-0770

E: [edwardkim@kr.kpmg.com](mailto: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mailto:kwangryeolyi@kr.kpmg.com)

**박광빈**

책임연구원

T: 02-2112-3849

E: [kwangbinpark@kr.kpmg.com](mailto:kwangbinpark@kr.kpmg.com)

**이광용**

연구원

T: 02-2112-6611

E: [kwangyonglee@kr.kpmg.com](mailto:kwangyonglee@kr.kpmg.com)

[www.kr.kpmg.com](http://www.kr.kpmg.com)

© 2015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